

파리강화회의의 현실과 ‘식민지 조선’의 3.1운동

전상숙

1. 머리말

파리강화회의는 본질적으로 유럽의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행해진 전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파리강화회의의 목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지역분쟁이 유럽전쟁으로, 그리고 미·일의 참전으로 세계대전으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핵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간의 세력다툼이었다. 이 사실은 열강의 지배자들에게 자명했다. 파리강화회의의 의제는 그러한 전쟁의 성격에 충실하게 채택되었다. 강화회의 의제는 전쟁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이권이 집중된 유럽과

전상숙(田上淑)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한국정치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광운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지식산업사, 2004), 『조선총독정치연구: 조선총독의 '상대적 자율성'과 일본의 한국지배정책 특질』(지식산업사, 2012), 『한국인의 근대 국가관 '민주공화국' 재고: 식민지시기 국가의 이중성과 민족문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선인, 2017),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변혁이념, 민주공화주의』(신서원, 2018)가 있다.

직접 관련 국가의 영토에 집중되었다.¹

그러한 실제와는 다르게, 파리강화회의에는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약소민족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다.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된 윌슨의 14개조 선언에 민족자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서 식민지·약소민족들은 독립의 서광을 발견했다. 윌슨의 선언은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과 같았다. 이 때문에 여기에 의거한 파리강화회의에 식민지·약소민족들은 ‘민족자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윌슨의 14개조가 강화회의의 준거로 채택될 때 민족자결 조항에서 식민지 일반의 자결문제는 제외되었다.²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중속국에 중요했던 이 사실은,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약소민족들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한창 고조될 때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이러한 파리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변화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민족 독립의 열망을 구현하고자 했던 민족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식민지 한국사회의 대외 인식과 3.1운동의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3.1운동의 배경이 된 국제정세의 흐름과 그에 대한 민족지도자들의 인식·대응양식을 역사정치적으로 고찰해 그 현재적인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파리강화회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통치하에 있던 ‘식민지 조선’의 민족대표들이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서양 열강에 대한 독립 외교, 국제정치를 활용해야 할 필요와 의미를 환기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강화회의를 필두로 한 국제정세 변화와 이를 배경으로 한 민족지도자들의 외교활동·국제정세 인식을 3.1운동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맞이하게 된 해방에 이르는 식민지시기 민족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1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Paris Peace Conference* (이하 FRPPC) Vol. I, U.S. Department of State, 1919, pp. 14~15.

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 Supl. I, 1, U.S. Department of State, 1918, pp. 405~407, 421, 468~469.

고찰해 되새기는 한편,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활동을 돌아보며 역사정치적인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를 갖는다.

2. 파리강화회의와 윌슨의 ‘14개조 선언’

파리강화회의의 원칙이 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측의 승리로 이끌어 회의를 주도한 미국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이상주의적 이데올로기 아래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경제적 실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세계전략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전후 체제를 둘러싼 전승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갈등은³ 물론이고 강화회의에 기대를 걸었던 식민지·종속국들의 좌절과 갈등이 뒤따랐다.

세계대전의 종전에는 미국의 참전과 더불어서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참전은 추축국에 대한 연합국 측의 전력을 일층 강화시킴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시에 미국의 참전은 서양 열강 간의 새로운 이해의 갈등을 내포한 것으로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관계 재편을 예고했다. 이는 파리강화회의와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에게 공통된 위기의식을 갖게 해 종전을 촉진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세계사조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전쟁으로 지친 유럽에서 반제국주의·노동운동이 고양되고 식민지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며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특히 혁명 직후 볼셰비키 정부가 선언한 민족자결과 뒤이은 구(舊) 제정러시아 시기 복속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 원칙의 실천은 식민지·약소민족들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윤리

3 조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 정세」,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61쪽.

적으로 제국주의 전쟁 중인 자본주의 열강에 대하여 소비에트 러시아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쟁목적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선언’을 제창했다. 윌슨은 볼셰비키 정부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에 의한 세계분할을 부정하고, 무배상·무병합의 민족자결을 선언했다. 윌슨의 선언은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졌다. 약소민족에게는 식민지 민족의 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윌슨의 선언은 실제 유럽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윌슨의 이상주의가 결합된 막연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언적인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러시아혁명의 결과 대전 중 연합국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선언이었다는 사실이다.

윌슨 미국대통령의 14개조 선언은 전쟁 중 공산주의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 러시아가 민족자결을 비롯한 조치들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도덕적인 정당성을 얻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주의 진영의 대응으로서 제시되었다. 러시아혁명 직후 혁명정부가 공포한 민족자결 등 제반 조치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의 비도덕성을 부각시켜서 식민지·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비판의식을 촉진시키며 ‘민족해방운동’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정부는, 러시아의 전선 이탈뿐만 아니라 1918년 독일과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체결과 같이 실제적인 면에서 진행 중인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했다. 또한 러시아 혁명정부가 공포한 제정러시아 시기 비밀조약과 무병합·무배상·민족자결 원칙 선언 등은 윤리적인 면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부정하고⁴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덕적 우위성을 선전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공화국의 등장은, 그 실제와는 별도로, 글과 이상으로만 존재했던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부상한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이상주의적 대안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4 노자와 유타카(野澤豊) 외, 박영민 역, 『아시아민족운동사』, 백산서당, 1988, 93~94쪽.

말 그대로 자본주의 일원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 제국주의 타도를 공동의 목표로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의 친화력에 기초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확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강력한 도전 세력이 현실로 출현한 것이다. 이에 열강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했지만 시베리아 간섭전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강 간 이해갈등은 단순하지 않았다.

권력 장악 직후 볼셰비키 정부는 교전국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를 의결했다. 무배상 지주 소유 토지의 즉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토지에 관한 포고’를 채택하여 지주와 황실령·수도원의 토지를 농민에게 양도하고, 모든 공장과 광산·운수기관 등을 국유화했다. 또한 러시아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정치적 평등과 자결권을 확립했다.⁵ 그리고 평화에 관한 포고에서 약속한 민족자결권을 ‘러시아 인민의 권리선언’을 통해서 “모든 국민 및 민족 집단의 자결권”으로 재천명했다. 러시아 안팎의 모든 민족의 자결권과 분리 독립을 인정한 것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모든 피억압 민족의 독립 욕구를 충족시키며 약소민족의 지지를 얻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새로운 볼셰비키 정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밖으로는 세계혁명전략의 일부로 식민지·약소민족 대 제국주의 간의 갈등을 이용해 세계혁명운동을 촉구하고자 했다.⁶

볼셰비키 정부는 교전국들에게도 무병합·무배상 원칙의 평화에 관한 포고를 제의하고 카라한 선언을 발표해 자극했다. 특히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반전투쟁을 선동했다. 각지에서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크게 고무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었다.⁷ 러시아혁명의 영향과 그에 호의적인 대중의 감정은 전쟁 중인 연합국에게 큰 위협이었다. 러시아혁명 직후 고조된 세계적인 혁명운동은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반제국주의 성격을 강화했다. 공산주의 소비에트공화국의 존재는 제국주의의 배후지에 강

5 W. Z. 포스터, 편집부 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제 1, 2, 3 인터내셔널의 역사』, 동녘, 1988, 26~27쪽.

6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56쪽 각주 29 참조.

7 김성윤 엮음,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 거름, 1986, 58~64쪽.

력한 타격을 입혔다. 식민지 지배체제 위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소비에트공화국은, 전후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재편할 자본주의 열강에 대하여 공산주의체제의 실존을 증거함으로써 세계를 두 개의 체제로 나누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강조하며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격화시켰다.

이에 대항하여 제시된 윌슨의 민족자결은, 비도덕적으로 여겨진 전쟁의 목적에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결을 선언해 도덕성을 입히고자 한 선언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전쟁 중인 열강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었다. 1918년 10월 휴전이 임박하자 연합국 지도자들과 미국 측은 윌슨의 14개 조항을 강화협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논하는 회담을 했다. 미국은 논의과정에서 그것이 막연하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연합국 측과 협상하기 위한 14개 조항에 관한 자세한 해석문서를 준비해 선언 당사자인 윌슨 대통령의 인가를 받았다. 이때 식민지 민족자결의 문제가 전승국과 직접 관련된 곳에 국한된다는 것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다.⁸ 윌슨은 처음부터 민족자결은 전쟁에 관련된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식민지 각처의 민족지도자들이 민족자결이라는 용어를 독립의 구호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다.⁹

식민지 민족들이 '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인 14개 조항 중 제5항에 대한 해석은 "자결권은 분명히 전쟁으로 인한 식민지의 권리에 적용된다. 그것은 전쟁의 결과 국제적인 고려사항이 될 독일 식민지와 기타 식민지를 뜻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해석에 윌슨 대통령은 "만족"을 표했고, "불완전국가들이 강화회의에 입장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다"는 의견까지 첨가했다. 식민지·약소민족 대표들이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조차 원천봉쇄되었다.

이러한 민족자결에 대한 조문해석은 서양 열강들도 식민지 민족들과 마

8 프란크 볼드윈, 「윌슨, 민족자결주의, 삼·일운동」, 『삼·일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521~522쪽.

9 프란크 볼드윈, 「윌슨, 민족자결주의, 삼·일운동」, 531쪽.

찬가지로 윌슨의 14개 조항을 식민지 민족의 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필요했다. 그들은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제국주의적인 욕망과 식민지를 통해서 이미 획득한 이권의 상실을 원하지 않았다. 윌슨은 연합국 측의 식민지문제가 열강 간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얽힌 난해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윌슨은 14개 조항 중 제5항 민족자결에 대한 조문 해석을 통해서 연합국들의 영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전쟁을 종결하고 그와 결합시킨 국제연맹의 결성을 이루고자 했다. 그리하여 파리강화회의는 윌슨의 민족자결 선언이 빛을 광범위한 반향과는 정반대로, 연합국 어느 국가도 독일의 식민지 처리를 제외한 식민지 문제를 논하지도, 논하려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의 식민지는 본질적으로 식민지문제로서가 아니라 전쟁과 직접 관련된 주요 관심사였고 연합국에게 가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가 되었다. 윌슨의 14개 조항은 이러한 열강 간의 국제정치적 이해갈등을 조정하며 파리강화회의의 기반으로 합의될 수 있었다.¹⁰

3.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열강으로 인정된 일본

파리강화회의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족 간의 인종적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이 가졌던 태평양 연안 및 산동성의 권리와 이익문제였다. 전자는 서구 열강의 백인 중심주의와 일본에 대한 견제를 형식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였다. 후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열강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였다.

당초 파리평화회의에는 1917년 이래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던 중국도 일본과 같이 전승국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영일동맹에 의거한 영국의 부분적인 참전 지원 요청을 기회로 하여 전면전을 선포하며 참전한 일

10 *FRUS* Supl. I, 1, pp. 405~407, 421, 468~469.

본의 목적은 삼국간섭과 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중국에서의 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양 열강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집중해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권익을 확정하는 데에 집중했다. 참전 직후 독일에 개전을 선언하고 독일령 남양제도와 청도를 점령한 일본은 중국에 이른바 '21개조'를 요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동성과 남만주, 내몽고의 이권을 확정했다. 일본의 만주 이권은 미국과의 긴장을 촉진했지만 미국의 중국 이권이 일본과 전쟁을 불사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본은 참전으로 획득한 동아시아의 이권을 강화회의를 통해서 공고히 하고자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일본은 1914년 9월에 영국·프랑스·러시아가 단독 불강화와 강화조건의 상호협정을 약속한 런던선언에 가담하고, 영일동맹의 필요를 견지하던 영국으로부터 사실상 만주진출을 인정받았다. 일본이 독일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며 러일동맹을 역설하던 러시아로부터는, 영·미에 공동 대항하는 의미의 군사협정과 같은 제4차 러일협약을 체결하며 중국진출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1917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일본은 영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4개국과 강화회의가 열릴 때 일본의 중국에서의 이권을 지지한다는 비밀협약을 체결했다.¹¹ 일본이 미국과 맺은 이시이·랜싱협약은 이러한 비밀협약의 일환이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권익을 재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강의 전반적인 이권과 직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다. 그 결과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전쟁 중 획득한 동아시아의 권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동성과 적도이북 독일의 권익, 중국과 맺은 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그리고 서양 열강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했다. 산동에 대한 권익을 논하면서 14개 조항에 계획되어 있던

11 이케이 마사루(池井優), 『三訂 日本外交史概説』, 慶應通信, 1992, 124~126쪽; Roy W. Curry,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1918-1921*,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57, pp. 157~161.

국제연맹규약에 인종차별철폐 조항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은 자국의 이권을 관철하기 위하여 열강의 의견 분열을 촉진하는 전략을 폈다.¹² 서양 열강의 백인 중심주의와 급격히 부상한 황인종 일본에 대한 견제가 국가 간의 이권, 전쟁과 종전의 명분 그리고 평화회의와 결부된 국제연맹 창설과 중첩적으로 얽혔다.

사실 전쟁 중 연합국 지도자들은 일본과 맺은 비밀협정을 통해서 이미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한 것과 같았다. 문제는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국민적 저항과 파리강화조약 조인식에 전권단조차 파견하지 않겠다는 중국정부, 그리고 특히 일본과 중국을 놓고 긴장관계에 있던 미국이었다. 전시 열강의 비밀협정과 무관하게 참전한 미국은 비밀협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종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은 종래의 입장으로 중국의 영토보존과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해 산둥문제를 5개국회의에서 결정된 영토처리방식에 따라서 연합국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은 일본과 협약 시 미국 입장에서는 유보했던 일본의 '특수권익' 문제를 미국의 위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태도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영구평화를 지향하는 14개조 선언을 제창하고 재정적·군사적인 영향력을 배경으로 14개조 선언이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상주의 국제정치구상이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국제연맹의 결성으로 현재화될 수 있도록 했다. 윌슨의 구상은, 중국 이권을 놓고 일본과 긴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권익과 위신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최강의 경제력을 최강의 정치력으로 재편성하는 새로운 세계체제 재편성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하여 영국·프랑

12 *FRPPC* Vol. III, 1919, pp. 755~756; Ian Nish,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Interwar Period*, Praeger Publishers, 2002, pp. 20~21; Roy W. Curry,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1918-1921*, p. 253.

스·러시아·이탈리아 4개국으로부터 전쟁 중 이미 독일의 산동권익 계승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중국과도 이에 동의한다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맺은 이시이·랜싱협약으로 미국 역시 일본의 '특수권익'을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영토문제가 당사국 간의 문제로서 간섭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권상실을 원치 않는 연합국 측은 전시 비밀협정 유지를 고수하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¹³ 일본은 미국과 협약을 체결할 때 상대인 랜싱이 일본의 '특수권익'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¹⁴ 이후 일본의 만몽 특수권익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던 브라이언 국무장관의 서한¹⁵ 등을 증거로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산동의 권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화조약과 국제연맹에 불참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했다.¹⁶

이 두 가지는 파리강화회의를 주도하는 윌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산동문제가 단순히 일본과의 산동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 다시 말해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했다. 또한 피우메 할양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탈리아가 파리강화회의에서 탈퇴한 상황에서 일본마저 불참하면 파리강화회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했다. 더욱이 윌슨의 이상주의 구상을 구현할 국제연맹에 일본의 참여는 민족 간 인종적 평등을 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상주의의 시험대가 될 국제연맹에 일본이 참가하는 일이 중요했다. 또한 일본의 동참은 당시 문제가 된 미·일 간 이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었

13 *FRUS* Supl. I, 1, 1918, p. 407, 421~422; *FRPPC* Vol. V, 1919, pp. 129~130.

14 Roy W. Curry,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1918-1921*, pp. 116~117.

15 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日本外務省, 1965, 204쪽, 385~401쪽.

16 *FRPPC* Vol. III, 1919, pp. 755~756.

다.¹⁷ 결국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다.¹⁸ 그리하여 파리강화조약에 산동의 권익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중국에서 5·4운동이 확산되고 중국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 불참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강화회의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석한 일본은 반식민지화된 중국에서의 지분을 서양 열강으로부터 공히 승인받고 다시는 삼국간섭과 같은 외교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국제적인 입지를 다졌다. 중국이 종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끝에 있던 일본에게도 이권의 일부를 할애하게 된 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명실공히 열강의 반열에 선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었다. 일본의 한국식민화도 공공연해졌다.

4. 윌슨의 민족자결선언과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윌슨의 14개조 선언에서 민족 독립의 희망을 발견한 우리 민족지도자들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고 지원을 얻고자 했다. 파리강화회의에 거는 기대는 국내외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매우 컸다. 각지에 산재해 있던 민족지도자들은 대표를 파견해 ‘조선’ 독립문제가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타결되게 하고자 했다. 1918년 10월 미국의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정한경·민찬호를 대표로 선출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것을 결의했다.¹⁹ 1918년 11월 휴전 성립 후 중국에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특파된 찰스 크레인으로부터 독립 지원 의사를 들은 여운형은 장덕수와 함께 윌슨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독립에 관한 요망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그리고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들과 신한청년단을 결성해 김

17 전상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316쪽.

18 Roy W. Curry,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1918-1921*, p. 283.

19 『독립신문』, 1921. 3. 26.

규식을 대표로 파리에 파견했다.²⁰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도 5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김규식을 강화대사로 임명하는 한편, 한인신문 발행자 윤해와 고창일을 파리로 파견했다.²¹ 국내의 유럽대표들도 ‘파리장서’를 작성하여 파리의 김규식을 통해서 강화회의에 제출하게 했다.²² 그 밖에도 국내의 민족지도자들은 윌슨 대통령에게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조선’의 민족 독립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결선언이 3.1 민족 독립운동이 발화되어 ‘대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적극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3.1독립선언은 이제 “전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동한 발동”인 ‘도의’의 신시대, 곧 민족자결주의의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한국인들이 “최대급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공표했다.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로서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고 세계만방에 선언했다.²³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라고 선언되었다. 자주적인 ‘조선’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근대적인 민족독립국가를 수립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족’의 이름으로 ‘조선인(조선민족)’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근대적인 독립국가 수립의 의지를 천명한 3.1운동은 병합을 전후로 하여 자각되기 시작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10쪽; 이기형, 『여운형』, 창작사, 1988, 47~50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여운형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몽양여운형선생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 1』, 한울, 1991, 409~410쪽.

21 파리위원부선전국 편, 『구주의 우리사업』, 대한민국임시정부주파리위원부통신국, 1921, 12쪽; 金正明 編, 『韓國獨立運動 II』, 原書房, 1967, 20쪽.

22 한국유럽운동 파리장서비건립위원회 편, 『한국유럽독립운동 파리장서략사』, 한국유럽운동 파리장서비건립위원회, 1973, 39~43쪽.

23 국가보훈처 편,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 국가보훈처, 2002, 37쪽; 전상숙, 「‘평화’의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 의미: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소통』 4, 2009 참조.

한 근대적인 민족의식이 거족적인 민족주의로 발현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들은 세계대전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비판 사조와 민족자결의 이상주의를 접하며 민족적 독립과 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를 전 민족적인 항거로 천명했다. 이후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항일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에서 천명된 항일 민족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제국주의에 대항할 유일한 길로 인식된 민족 주권인식이 결합된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주체로서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민족정신의 공유자로서 민족국가의 국민이 될 한민족에 대한 인식이 응결된 것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이 발현하는 배경이 된 국제정세 변화와 그에 대응한 민족지도자들의 외교적 독립운동의 필요는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확고하게 항일 독립투쟁을 추진하며 민족적 독립과 독립 민족국가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기관인 정부적 기구 수립의 필요를 절실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전 민족적인 독립 근대국가를 상징하는 통합적인 지도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실을 맺었다.²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대한제국의 붕괴로 폐멸된 한국 민족의 국가를 되찾아 애국계몽운동 이래 모색되어온 근대적인 민족국가로 재건하고자 한 항일 독립의 의지가 3.1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자주적인 한국 민족의 근대적인 민족국가에 대한 지향과 한국 국민의 평등한 자유와 주권에 대한 소망이 투영되어 독립 ‘대한민국’의 수립을 전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인민주권의 공화주의가 독립 민족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말 이래 자각되기 시작한 민족의식이 병합 전후로 각성되어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동시에 이러한 민족의식의 전개에 기초하여 한말 이래 지향된 민주정(民主政)으로부터 대동단결선언을 통해서 주창된 평등한 인민이 국가의

24 전상숙, 「세계대전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활동의 현재적 고찰」, 고정휴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437쪽.

주권을 갖는 입헌공화정이 구체화된 것이다.²⁵

3.1운동은 민족이 독립운동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중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었다.²⁶ 그리하여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민족적 정부기구인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독립 근대 민족국가의 기초이자 이념체계로서 민족주의와 주권재민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초석이 되었다. 세계사적으로 전제군주제가 청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3.1운동을 통해서 전제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주권의 독립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항일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던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민족운동이²⁷ 범민족운동과 협동하여 이후 항일 민족주의 통일전선운동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전 민족적인 반일항거로 발현된 민족주의는 이념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의 독립과 민족국가 건설의 지향으로 현재화되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하여 주권재민의 공화주의를 정체로 한 민주공화국을 독립 민족국가의 상으로 정립되게 했다. 한국 사회의 근대국가가 서양 근대 민족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민주권과 평등사상을 핵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토대로, 민족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는 정치체제·국가체제를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을 근대적인 민족국가의 상으로 정립했다.²⁸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정립된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적인 독립 민족국가 건설관은 전 민족적으로 공유되었다. 이 3.1운

25 전상숙,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변혁이념, 민주공화주의』, 신서원, 2018, 167~192쪽.

26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91~93쪽.

27 姜徳相,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とロシア革命」, 『歴史學研究』 329, 1967; 劉孝鐘, 「極東ロシアにおける10月革命と朝鮮人社會」, 『ロシア史研究』 45, 1987; 할 테루유키, 서대숙 역음,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태암, 1989.

28 전상숙,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변혁이념, 민주공화주의』, 제3부 참조.

동의 의미와 성과는 부정될 수 없는 일본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민족적 생존과 독립국가 수립 의지와 투쟁을 역사적으로 증거한다. 이 때문에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시기 항일독립운동사는 국권상실 이전 대한제국에 이르는 한국사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치 이념적 지향을 전망하는 민족주의의 이념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사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적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세칭 민족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차이가 항일 민족운동 방식과 결부되어,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한국민족주의 이념과 민주공화국의 내용이 하나의 이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처럼 민족독립운동과 함께 균열된 역사적 귀결은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민지시기 이래 전개된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 지구적인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며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을 갖고 현실적으로, 또한 냉정하게 고찰해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5.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독립 청원과 식민지시기 민족지도자들의 대외정세 인식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월슨의 14개조 선언에 입각한 파리강화회의에서 열강에게 독립을 청원하는 외교활동부터 시작했다.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임시정부의 제안」은²⁹ 파리강화회의에 일본의 한국 ‘병합’(併呑)과 지배의 부당성, 한민족 독립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호소했다.

(14) 일본의 대륙정책은 실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추진해온 정치적 계획. 일

29 한국임시정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 임시정부의 제안」,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6 외무부」, 2007, 19쪽.

본이 한국을 합병한 것은 이를 사실로 드러낸 것입니다. … 일본 이외의 세계를 살펴볼 때 영국·미국·프랑스 3국에 가장 위협스러운 것은 일본의 무제한적인 대륙정책 실행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일본 대륙정책의 본격적인 실행은 한일병합으로 한국을 대륙침략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은 중국의 인력과 재력을 손아귀에 넣고 다시 이를 자본 삼아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태평양의 권익을 독점하려 합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식민지로 삼아 이곳에 무제한적으로 이민을 보내는 것이 일본 대륙정책의 최종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병합이 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추진해온 대륙정책이라는 정치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의 대륙을 향한 침략이 지속되어 장차 영국·미국·프랑스 등 열강에도 중국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제국주의정책 자체가 부당하고 기만적이라는 점을 고발하며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억제하고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또한 일본이 러일전쟁 도발 당시인 1904년 한국에게 강제로 체결하게 한 ‘한·일 공수동맹조약’에서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³⁰ 한국을 병합한 것은 기만적이고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한 병합에 기초하여 대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대륙침략의 근거지로 삼고 식민지배를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제차 강조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일본 대륙정책의 실상과 ‘조선인’의 지속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설명하며 병합조약의 폐기와 ‘대한’ 독립을 호소했다.³¹

3.1 독립선언을 통해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선언한 민족대표들은 파리

30 한국임시정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 임시정부의 제안」, 17쪽.

31 한국임시정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 임시정부의 제안」, 19~23쪽.

강화회의가 민족자결의 신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고 인식했다.³² 민족자결이 선언된 정세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파리와 워싱턴 및 국제연맹에 대한 활동 강화 등 열강에 적극적으로 독립을 청원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했다.³³ 그렇게 파리강화회의를 필두로 식민지 한국인들의 외교적 독립운동은 활성화되었다.³⁴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각성되어간 식민지·약소민족들의 민족운동이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서양 열강 중심의 근대 국제법체제 속에서 대외적으로 역설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그것은 선진 자본주의 열강 간의 전쟁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준비되어간 것이었지만, 세계대전과 파리강화회의는 '민족자결'이 각지로 보편화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냈다. 식민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상해에 있던 여운형은 중국대표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을 독려하기 위해 파견된 미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의 연설에 감명했다. 크레인은 파리강화회의가 각국 간의 감정과 오해 등을 제거하여 진정한 세계평화를 가져오고, 피압박민족에 대한 해방을 강조하며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해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형은 이에 크게 감명받아 독립청원을 도모했다고 한다.³⁵ 그가 작성한 독립청원서의 취지는 파리강화회의가 종래의 불합리한 불평등 제반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전제 위에서 작성되었다. 한국이 작지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으니 국제생활의 생명을 부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³⁶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32 「최민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19~20쪽; 「권동진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41~42쪽, 49쪽; 「오세창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52쪽; 「임예환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74쪽.

33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 제4집」,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임정편 II』, 국사편찬위원회, 1973, 397~401쪽.

34 『독립신문』, 1919. 10. 11. 사설.

35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피의자 여운형 신문조서 제1회」, 1929. 7. 409쪽.

36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피의자 여운형 신문조서 제1회」, 409~410쪽.

위치가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4개국에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정 중립국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벨기에의 위치와 같다고 했다. 일본·중국·러시아 3개국에 포위되어 있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상태로는 동아시아 3국의 정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양평화 또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을 독립시켜서 벨기에 같은 엄정한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⁷

이러한 여운형의 인식은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복합적·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민족 독립의 절대적인 열망에서 주관적·단편적으로 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일국이 아닌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열강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조정되는 주요 대상이 된 상황, 러시아혁명에 대한 열강의 반혁명 간섭전쟁 전개와 소비에트 혁명정부가 혁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안정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취하고 있는 형편, 무엇보다도 일본이 열강의 반열에서 서양 열강들과 함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등 국제정치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복합적인 현실주의적 고려가 미흡했다.

강화회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상해까지 특사를 보내서 중국대표의 참석을 독려했던 것은 민족자결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열강들과의 강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민족지도자들은 월슨의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조 선언이 공표되고 또 파리강화회의의 준거가 된 사실에 고무되어 열강들 간의 비밀외교가 여전히 전쟁 중에도 행해지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내용까지 고려하지 못했다. 전쟁을 연합국 측의 승리로 이끌고 강화회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왜 한국과 같이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중국에까지 대통령특사를 보내고, 강화회의를 통해서 민족독립을 청원하라고 독려하는지, 국제정치의 실태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언행 이면에 있는 외교활동의 이해타산적인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37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여운형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1929. 7.), 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 1』, 한울, 1991, 468쪽.

공표된 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독립을 청원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안이한 국제정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의 역학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식민지·약소민족의 외교활동은 열강에 대한 민족독립 지원 요청이 긴급했던 만큼 충분히 전략적이었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제국주의시대에 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 아래에서 탄압받던 ‘조선인들’은 국제정치적으로 선언된 이상주의를 기회로 삼아서 일본보다 앞선 서양 열강에 독립을 청원해 민족 독립을 위한 일보라도 내딛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치 인식은 당시 한국 민족지도자들에게 일반적이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월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당분간 국제연맹에서 위임통치해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니³⁸ 국내외 민족 대표자들이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에 고무되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 청원을 위해 대표를 파견한 것, 그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을 도모한 것 모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계 인물들의 주장 격이었던 송진우는 월슨이 제창한 바대로 국제연맹이 창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제연맹이 약소국들에게 자결권을 주지 않으면 그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므로 결국 한국도 위임통치를 거쳐서 자결권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러한 이상적인 방안이 거부된다면 미국이 선전포고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³⁹

결국 파리강화회의 결과 국제연맹이 창설됐지만 그 창설을 주창했던 미국은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서 동참하지 않았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적용된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은 전쟁 당사국인 열강 간의 식민지 재편에만 적용되었다. 파리강화조약과 결합된 국제연맹규정 제22조는 ‘민족자결’이 아니라 사실상 열강의 식민주의가 지속되는 위임통치제도를 구체화했다. 국제정치는 힘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이었다. 그에 대처할 만한 국제정치적

38 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第二課 編, 『朝鮮民族運動年鑑』, 上海: 東文社, 1946, 1쪽.

39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66쪽.

역학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했어도 실효를 장담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현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의 민족지도자들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며 표현되는 외교적 수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는 현실적인 국제정치인식조차 부족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월슨의 민족자결선언과 파리강화회의는 식민지 민족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웠고, 국제연맹규정 제22조에서 위임통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결’이라고 명시한 규정은 이후 식민지·약소민족이 대외적으로 민족적 독립을 주창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파리강화회의의 경험은 이후 식민지 ‘조선인’들의 대외적인 항일 독립운동이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열강에 접근하여 열강들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 협약과 조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독립 청원과 주창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전개하는 데 초석이 되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해방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한국 민족지도자들에게 국제정치인식을 갖추는 일이 역부족이었다고 해서 현실적인 힘과 실리의 국제정치를 파악하는 이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파리강화회의를 독립청원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접한 윤치호는 “당국자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 게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다.⁴⁰ 그의 판단은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윤치호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이 열강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 경주한 국제정치적 노력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병합된 이후 병합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사실을 열강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병합 이후 한국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일본과 그와 반대로 말하는 식민지 ‘조선’, 열강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냐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다른 열강에게는 일본과 전쟁을 치를 만큼 중

40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65쪽.

요한 곳이 아니므로 결코 한국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미일전쟁설을 언급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냉철히 비난했다.

윤치호의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인식은 약소국에 비해서 많은 권력과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의 의도와 정책이 현안 문제들을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역학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었다.⁴¹ 그는 일본은 애국심이야말로 인간의 최고 덕목이라고 가르치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민족자결’은 파리강화회의의 14개조 원칙 중 하나이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통합하려는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의 자결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일본은 미국의 인종차별에 혼신을 다해 반대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매사에 민족차별을 실행한다 하며 “결국 힘이 정의”라고 했다. “결국 힘이 정의”라는 무정부적 국제관계의 속성을 꿰뚫고 있던 그는 한국 관련 정보가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열강들에게 전달되고,⁴² 한국문제가 일본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일본의 힘에 종속적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⁴³ 한국문제를 놓고 열강이 일본과 전쟁을 치를 만큼 무모하지도, 그 정도로 서양 열강에게 한국문제가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윤치호는 한국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⁴⁴ 이러한 그의 현실주의 국제관계 인식은 되지도 않은 일을 해서 “당국자들의 비위를 거슬”러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종래와 같이 “침묵”하여 현상이라도 유지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패배주의적인 단견적 실리주의로 이어졌다. 그는 그렇게 식민지시기를 살았다.

41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95쪽.

42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1995, 68~69쪽.

43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을 제국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확실하므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윌슨 대통령의 선언은 일본 영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New York Evening』, EA 통신, 1919. 3. 11. 또한 3.1운동에 대해서도 이는 순전히 내정 문제이고,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각별히 잔인무도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배일감정을 부채질하는 언동에 유감을 표했다. *New York Christian Science Monitor*, 1919. 4. 21. 이상 조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 정세」, 65쪽 각주 16 재인용.

44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66~67쪽.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험적으로 국제관계의 현실을 깨달아간 많은 식민지 한국의 민족지도자들은 부질없을지라도 열강에 민족의 독립을 청원했다. 무위로 끝날지라도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의한 병합으로 ‘일본제국의 한 지역이 된 조선’의 현실은 기정사실이 되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 ‘병합’한 일본이 목적인 대로 한반도는 일본 국토의 일부가 되고 한민족은 일본의 신민이자 일본 천황의 백성이 되고 말 것이었다.

식민지 한국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침묵”하는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는 현실의 처세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과 근대적인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 행동하며 민족 독립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식민지·약소민족의 현실은 비현실적이고 부질없을 것 같은 행위를 현실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선택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독립 청원외교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은, 국제정치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 선언된 이상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대내적으로는 그에 대한 민족적 기대를 결집하여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국운동이었다.

6. 맺으며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각되어간 식민지·약소민족들의 민족운동이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국제사회에 대하여 역설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파리강화회의는 ‘민족자결’이 각지에 보편화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냈고, 식민지 한국의 민족지도자들이 서양 열강에 대하여 민족의 독립과 지원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활성화는 동인이 되었다.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식민지 한국의 민족지도자들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며 표현되는 외교적 수사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을 국제정치의 객관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거나 심도 있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활용하며 식민지의 현실을 타개할 만한 현실적인 전략적 접근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일찍이 현실적인 힘의 국제정치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윤치호 같은 인물은 “당국자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 게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약소국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권력과 권위를 보유한 강대국의 정치적 목적과 현안들을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역학과 속성을 꿰뚫어보았다. “결국 힘이 정의”라는 그의 국제정치인식은 일본 대외정책의 틀에서 한국문제가 결정되고, 그 연장선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서양 열강이 한국을 인식하는 국제정치의 틀에서 한국문제가 일본에 종속적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 미국을 비롯한 열강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한국문제를 놓고 일본과 전쟁을 치를 만큼 무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파리강화회의를 필두로 서양 열강에 민족 독립의 지원을 요청했던 민족지도자들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현실적인 전략적 접근이 역부족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무모했다거나 이상주의자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윤치호와는 다른 관점에서 식민지 민족의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에 민족적 독립과 지원을 호소하고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민족의 현실은 파리강화회의를 경험하며 식민지·약소민족의 현실을 국제관계 속에서 절감하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이상주의의 허상을 뼈저리게 경험했음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열강에 독립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무모하더라도, 무위가 되더라도,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식민지 민족이 처한 현실은 대한제국을 병합한 일본이 목적인 바대로 될 수 있었다. 한민족은 ‘제국일본의 신민’으로서 만족하는 일본국의 일원이 되고 한

반도는 '제국일본국의 지역 조선'으로 기정사실화되어 고착될 운명이었다.

그렇게 되면 식민지시기 한민족은 항일 민족 독립의 의지도 뜻도 없었던 일본국의 한 지역 조선의 조선인이 되어 일본사의 한 소절을 장식하게 될 것임은 뻔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시기 민족지도자들과 한국인들은 일본 당국자의 뜻을 거스르며 무모하게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적으로 주창하고 독립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대외적으로 민족 독립의 지원을 청원하는 등 혼신을 다해 한민족의 식민지시기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써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약소민족의 현실주의 정치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한국의 민족지도자들은,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윤치호처럼 당국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침묵하는 최선의 방책'을 택하는 근시안적인 현실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 민족의 독립과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이라도 찾고 모색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고 행동했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약소민족의 현실이자 현실주의가 아닐 수 없었다. 민족지도자들의 독립청원 외교활동은, 국가이익에 기초해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실태를 인지한다고 해도, 이상주의적인 선언과 그에 기대를 거는 민족적 정서에 호응하며 실제적으로 접근해 식민지 민족의 독립 문제를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결한 독립운동이었다. 그 실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궁극적인 목적인 독립은 아니더라도 소기의 성과라도 기대해야 했던 현실주의적인 독립운동이자 정치운동이었다. 그 결과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록 민족분단 상황이라는 하지만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민족 분단의 현실과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상황은 변함이 없다. 과연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100여 년이 지난 시간만큼 성숙하고 냉철하게 고찰하고 풀어가고 있는지, 국제관계의 역학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